



농림축산식품부

보도자료

힘내라
대한민국

2020년 11월 19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식량산업과 과 장 지성훈(044-201-1831), 사무관 박정수(1835) / 제공일 : 11월 18일(총 40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

- 지속가능한 국산 밀 산업 기반 구축과 자급률 제고를 위한 로드맵 마련 -

《 주 요 내 용 》

- ☐ 농림축산식품부는 「제1차(2021~2025)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」을 수립·발표(「밀산업 육성법」에 따른 첫 번째 5년 단위 법정계획)
- ☐ 지속 가능한 국산 밀 산업 기반 구축을 통해 밀 자급률 목표 10%를 2030년까지 달성하되 그 중간단계인 2025년까지 밀 자급률 5% 달성을 위한 5대 분야 14개 과제 제시
 - * 식량자급률 목표 : ('20) 1.0% → ('25) 5.0 → ('30) 10.0
- ① (생산기반 확충과 품질 고급화) 밀 전문 생산단지 확대, 보급종 공급체계 개선, 자급 취약 식량작물 생산 안전망 확충
- ② (국산 밀 유통·비축 체계화) 국산 밀 건조·저장시설 확충, 국산 밀 비축제도 운영, 밀 품질관리제도 도입
- ③ (대량·안정적 소비시장 확보) 대량 수요처와 계약재배로 소비 확대, 주력 소비품목 육성, 음식점 밀 원산지표시제 도입
- ④ (현장문제 해결형 연구개발(R&D) 확대) 밀 안정적 생산 작부체계 구축, 현장 맞춤형 품종 조기 실증·보급, 수요기반 확대 R&D 투자 강화
- ⑤ (국산 밀 산업계 역량 강화) 민·관 참여 소비기반 확대, 국산 밀 산업 발전협의체 운영

1. 제1차 기본계획 수립 배경 및 과정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국산 밀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「제1차(2021~2025)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」(이하 기본계획)을 발표하였다.
- 이번 기본계획은 「밀산업 육성법」(2020.2.28. 시행)에 근거한 5년 단위 첫 번째 법정계획으로, 제2의 주곡이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밀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소비 확산을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산 밀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.
- 그간 농식품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생산자단체, 제분·가공업체, 대학, 연구기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총 13회에 걸친 회의·간담회·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
-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산·유통·비축·소비·연구개발(R&D)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국내 밀 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,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기본계획에 포함하였다.
- 향후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·추진하고, 생산자단체, 제분·가공업체, 전문가 등이 참여한 ‘국산 밀 산업 발전협의체’를 구성·운영하여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·보완해 나갈 계획이다.

2. 제1차 기본계획 목표와 추진방향

- 농식품부는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밀 자급률 5%(재배면적 3만 ha, 생산량 12만톤)를 우선 달성한 후, 제2차 기본계획(2026~2030년) 기간내 10%를 달성할 계획이며,
- 이를 위해 5대 추진방향에 따라 14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.

비 전

지속 가능한 국산 밀 산업 기반 구축

목 표

= 2030년까지 밀 자급률 10% 달성 =
2025년 밀 자급률 5%(면적 3만 ha, 생산량 12만톤) 달성

국산 밀 산업 개편 방향

	As is		To be
생산	소규모·분산 생산, 품질관리 미흡	⇒	생산단지 중심 품질관리체계 구축
유통	소량·분산적 유통	⇒	대량·통합적 유통
가공	국산·수입산 구분 가공	⇒	국산·수입산 연계 가공
소비	다품목·소량 소비	⇒	주력품목·대량 소비

중점 추진과제

① 생산기반 확충과 품질 고급화

- ① 밀 생산단지 확대와 재배안내서 보급
- ② 보급종 공급체계 개선
- ③ 자급 취약 식량작물 생산 안전망 확충

② 국산 밀 유통·비축 체계화

- ① 국산 밀 건조·저장시설 확충
- ② 국산 밀 비축제도 운영
- ③ 밀 품질관리제도 도입

③ 대량·안정적 소비시장 확보

- ① 대량 소비처와 계약재배로 소비 확대
- ② 주력 소비품목 육성
- ③ 음식점 밀 원산지표시제 도입

④ 현장문제 해결형 R&D 확대

- ① 밀 안정적 생산 작부체계 구축
- ② 현장 맞춤형 품종 조기 실증·보급
- ③ 수요기반 확대 R&D 투자 강화

⑤ 국산 밀 산업계 역량 강화

- ① 민관 참여 소비기반 확대
- ② 국산 밀 산업 발전협의체 운영

3. 중점 추진과제별 주요 내용

① 생산기반 확충과 품질 고급화

- ① (생산단지) 현재 국산 밀 재배면적 5천 ha를 2025년까지 30천 ha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단지를 50개소(15천 ha)까지 조성하여 국내 자급률 제고와 품질 고급화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단지로 육성한다.

* 면적·생산량 계획 : ('21) 10천 ha/40천톤 → ('22) 15/60 → ('23) 20/80 → ('24) 25/100 → ('25) 30/120

* 생산단지 계획 : ('21) 32개소/5천 ha → ('22) 38/7 → ('23) 42/10 → ('24) 46/12 → ('25) 50/15

-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생산·재배기술뿐만 아니라 토양·시비 분석, 밀 품질 평가, 수확 후 관리기술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심층 컨설팅(단지별 최대 5천만 원)을 지원한다.
- 아울러,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관되고 체계적 재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단지별 특징을 반영한 재배안내서를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이다.

- ② (정부보급종) 종자순도를 높여 고품질 국산 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보급종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50% 할인 공급한다.

* 보급종 공급계획 : ('21) 1,330톤 → ('22) 1,900 → ('23) 2,280 → ('24) 2,850 → ('25) 3,230

- 또한, 보급종의 순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까지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품종검정이 가능한 대용량 분석법을 개발·보급할 계획이다.

- ③ (생산 안전망 확충) 밀·콩과 같이 식량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으나 자급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서는 논활용직불금 등을 포함,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 있어 우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.

* 밀(동계)-콩(하계) 등 자급취약 식량작물을 이모작하는 농가는 가중 지원

- 또한, 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달리 적용 중인 보험 보장기간을 통일하는 등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.

* 대상지역 : 5개 시·도(광주·전북·전남·경남·충남) → 전체 밀 재배지역

* 보험 보장기간 : 충남 6.30일, 그 외 시·도 6.20일 → 전국 6.30일 동일 적용

② 국산 밀 유통·비축 체계화

① (건조·저장시설) 중장기적으로 국내 밀 생산량의 50%는 유통의 규모화·효율화, 품질관리를 위하여 사일로·저온저장고 등을 구비한 지역 거점시설을 통해 보관·유통한다.

- 2025년까지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되, 생산량과 저장여력이 불균형인 지역을 중심으로 밀 전용 건조·저장시설 4개소를 신축·지원하고, 기능 보강이 필요한 기존 시설은 개보수를 추진한다.

* 국산 밀 시설용량('20.10월 현재): 총 30개 사일로·저온저장고에서 53천톤 보관 가능

** '25년 생산량(120천톤) = 지역 거점시설(53~60) + 정부비축(30) + 조기소진(30~37)

- 또한, 지역 거점시설에서 해당 지역의 밀 생산·유통을 전담할 수 있도록 파종·수확 등에 필요한 파종기와 범용 콤바인 등 기계·장비 지원도 병행한다.

② (국산 밀 비축)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2025년까지 전체 밀 생산량의 25% 수준을 비축한다.

* 비축물량 : ('21) 10천톤 → ('22) 14 → ('23) 20 → ('24) 24 → ('25) 30

- 비축 밀의 품질과 생산연도에 따라 방출 가격을 차별화하고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업체 수요에 맞게 공급하는 방출계획을 수립·시행할 계획이다.

③ (품질관리제) 밀은 제분·가공을 거쳐 제품 형태로 최종 소비되므로 원곡의 가공적성을 평가하는 밀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여 품질 고급화와 맞춤형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.

- 품질기준은 일본 등 우리나라와 소비성향이 비슷한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설정하고,
- 밀 생산농가의 품질관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밀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정부 비축 매입단가를 차등하여 매입할 계획이다.

* 추진일정: ('21) 연구용역 → ('22) 법제화 → ('23~) 품질관리제도 시행

③ 대량·안정적 소비시장 확보

① (계약재배) 생산과 소비처 간 연계를 통한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2021년부터 밀 재배 농가와 실수요업체(제분·가공업체) 간 계약재배 자금을 무이자 융자·지원한다.

- 계약재배물량은 2025년까지 전체 생산량의 10%인 12천톤까지 확대하고, 특히 국산 밀의 차별화된 소비시장 구축을 위해 친환경 인증 밀 농가와 계약재배는 우선 지원한다.

* 계약재배물량 : ('21) 4천톤 → ('22) 6 → ('23) 8 → ('24) 10 → ('25) 12

- 또한, 매년 계약재배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실수요업체에 대해서는 사업물량을 우대 배정할 계획이다.

② (주력 소비품목) 국산 밀 품질 수준, 소비 확대 및 수입 밀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력 소비품목을 다양화한다.

* 일본은 우동면(중력분)에서 자급률 제고 후 제빵·중화면(강력분) 등으로 품목 다양화

- 2021년부터 시장조사,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전략품목을 선정·대중화하고, 주력 소비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-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국산 밀 사용·함유 제품에 대해서는 제분 비율·사용실적 등에 따라 유통·마케팅 등을 지원한다.

③ (음식점 원산지표시제) 음식점 밀 메뉴 중 국내 소비량이 많고 수입 밀과 품질 경쟁이 가능한 메뉴를 중심으로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여 국산 밀 대중화를 추진한다.

* 추진일정: ('21) 연구용역 → ('22) 법령 개정 및 홍보 → ('23~) 시행

- 표시대상 업소는 공공급식 분야부터, 품목은 상대적으로 국산 밀 소비 비중이 높은 메뉴부터 도입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
④ 현장문제 해결형 연구·개발(R&D) 확대

① (작부체계 구축) 국산 밀의 안정적인 생육·수확 기간 확보를 위하여 고품질 밀 생산 중심의 밀-벼, 밀-콩 등 이모작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보급을 촉진한다.

* 밀 품질 향상을 위해 재배 후기 생산관리가 중요하나 후기작인 벼 이앙을 위한 밀 조기 수확과 수확기 다습한 환경 등 부정적 영향 해소를 위해 개선 필요

- 밀 이모작과 적합한 벼·밭작물 품종을 발굴·개발하고, 밀 생산단지의 농가가 참여하여 작부체계를 실증하는 한편, 산·학·관·연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실효성·경제성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.
- 또한, 실증·검증으로 소득향상, 생산비 절감 등이 입증된 사례는 교육·홍보를 통해 참여 농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.

② (우수 품종 실증·보급) 국산 밀 생산자·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·기능성 품종을 농가에 조기 보급하여 국산 밀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한다.

- 국내·외 유전자원에 대하여 지역적응성·제빵특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 품종을 선발한 후, 국산 밀 생산단지에서 현장 실증하여 검증된 품종은 농가에 조기 보급할 계획이다.
- 아울러,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국산 우수 품종도 농가에 조기 보급하고 제품화·산업화를 촉진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.

③ (수요 확대 R&D 강화) 현재 농촌진흥청의 밀연구팀(한시조직)을 2021년부터 과단위 정규조직으로 확대·개편하여 현장에서 요청한 시급한 연구과제를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.

- 밀 연구 조직·인력을 확대(2연구실 10명 → 3연구실 16명)하고, 품종·재배기술뿐만 아니라 유통·가공·소비까지 연구범위를 확대하는 한편,
- 농촌진흥청은 재배관리기술 개발, 최적의 작부체계 정립 등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
- 유통·가공·소비분야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연구기관·선도기업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연구수요와 연구성과의 불일치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.

5 국산 밀 산업계 역량 강화

① (민·관 참여 소비기반) 민간기업·지자체의 국산 밀 수요 창출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 기업·지자체를 발굴하여 국산 밀 소비 확대를 민·관이 동반 견인한다.

- 생산자단체·지자체와 민간기업 간의 '착한 생산-소비'의 선순환 상생 모델을 발굴·확산하는데 정부가 중개자 역할을 하고 점진적으로는 민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,
-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국산 밀 제품의 공공·단체급식 사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.

② (국산밀발전협의체) 국산 밀 생산자, 제분·가공업체,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정기적 소통·협력 채널로 (가칭)'국산밀산업발전협의체'를 구축·운영한다.

- 이를 국산 밀 산업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를 점검·보완하는 실무회의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.

□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“이번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약 5개월여에 걸쳐 생산 현장과 국산 밀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마련한 것”이라고 하면서,

- “기본계획이 관련 기관·부서,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생산자단체, 관련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·논의하고, 미흡한 점은 매년 점검·보완해 나감으로써, 밀 자급률 제고 대책을 현장에 기반한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뒷받침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참고1 제1차(2021~2025)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 로드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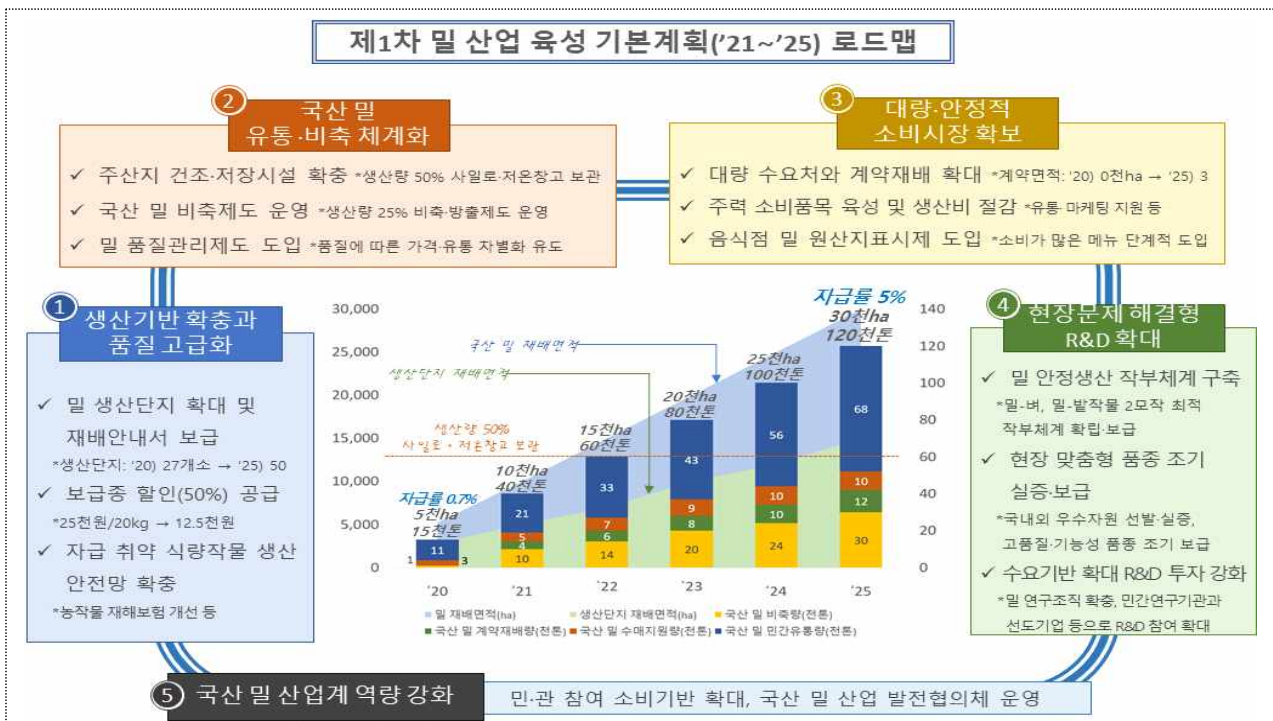
□ 국산 밀 생산 관련 목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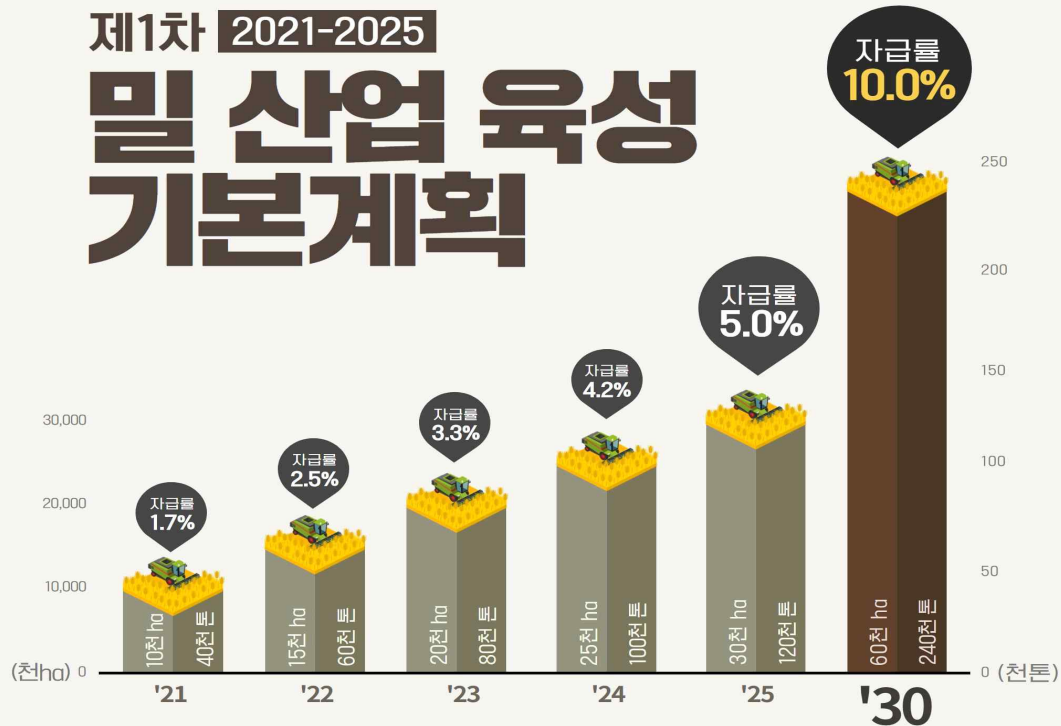
구분		'20	'21	'22	'23	'24	'25
재배 면적 (ha)	합계	5,224	10,000	15,000	20,000	25,000	30,000
	자급률(%)	1.0	1.7	2.5	3.3	4.2	5.0
	생산단지	2,834	5,000	7,000	10,000	12,000	15,000
	개소수(누계)	27	32	38	42	46	50
	생산량(천톤)	10	20	28	40	48	60
	보리 전환	-	3,000	5,000	6,000	8,000	9,000
	기타	2,390	2,000	3,000	4,000	5,000	6,000
생산량(천톤)		21	40	60	80	100	120
보급종 공급물량(톤)		-	1,330	1,900	2,280	2,850	3,230
국산 밀 비축 계획(천톤)		3	10	14	20	24	30
건조·저장시설 신축(개소)		-	2	-	2	-	-
계약재배 면적(ha)		-	1,000	1,500	2,000	2,500	3,000

* 생산량 단위 적용 : '20년 기준 400kg/10a

* 보급종 : (평균 파종량) 190kg/ha, (평균 단가) 25천원/20kg, (연도별 물량·예산안) 익년도 생산 단지 면적을 기준으로 전년도 파종 수요량 산정

□ 국산 밀 생산·유통·소비분야 주요 추진계획





1 생산기반 확충 및 품질 고급화

- ☑ 밀 생산단지 확대 및 재배안내서 보급
 - 생산단지: '20) 27개소 → '25) 50
- ☑ 보급종 할인(50%) 공급
 - 25천 원/20kg → 12.5천 원
- ☑ 자금 취약 식량작물 생산 안전망 확충
 -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등

2 국산 밀 유통·비축 체계화

- ☑ 주산지 건조·저장시설 확충
 - 생산량 50% 사일로·저온창고 보관
- ☑ 국산 밀 비축제도 운영
 - 생산량 25% 비축·방출
- ☑ 밀 품질관리제도 도입
 - 품질에 따른 가격·유통 차별화

3 대량·안정적 소비시장 확보

- ☑ 대량 수요처와 계약재배 확대
 - 계약면적: '20) 0천ha → '25) 3천ha
- ☑ 주력 소비품목 육성 및 생산비 절감
 - 공공급식 제품 유통·마케팅 등 지원
- ☑ 음식점 밀 원산지표시제 도입
 - 소비 비중이 높은 메뉴부터 단계적 도입

4 현장문제 해결형 R&D 확대

- ☑ 밀 안정생산 작부체계 구축
 - 밀·벼, 밀·밭작물 이모작 최적 작부체계 보급
- ☑ 현장 맞춤형 품종 조기 실증·보급
 - 우수자원 선발·실증, 고품질·기능성 품종 보급
- ☑ 수요기반 확대 R&D 투자 강화
 - 연구조직 확충, 민간연구기관·기업 등 참여

5 국산 밀 산업계 역량 강화

- ☑ 민·관 참여 소비기반 확대, 국산 밀 산업 발전협의체 운영



농림축산식품부

**국내 밀 자급 기반 확충을 위한
제1차('21 ~ '25)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**

2020. 11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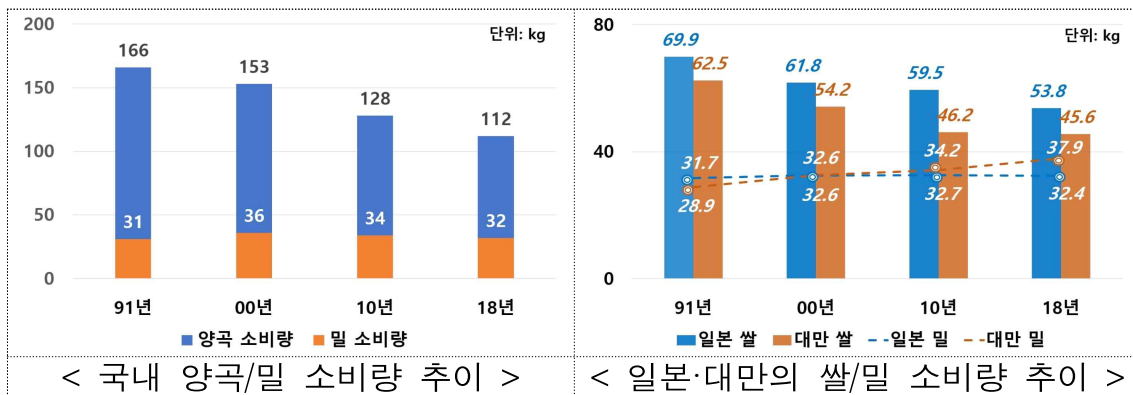
목 차

I.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 개요	1
II. 대내외 밀 수급 동향 · 전망	3
III. 국내 밀 산업 문제점	5
IV. 밀 산업 육성 기본방향	8
V. 중점 추진과제별 주요내용	10
1. 생산기반 확충과 품질 고급화	10
2. 국산 밀 유통·비축 체계화	14
3. 대량·안정적 소비시장 확보	19
4. 현장문제 해결형 R&D 전환	22
5. 국산 밀 산업계 역량 강화	25
[붙임1]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 로드맵	27
[붙임2]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 인포그래픽	28

1

계획 수립 배경

- 식생활 서구화, 소비 품목 다양화 등으로 밀 소비는 안정적인 추세
- 국내 양곡 소비량은 감소 추세이나, 밀 소비량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양곡 소비에서 차지하는 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가
 - 우리와 동일한 쌀 소비권 국가인 일본·대만도 유사한 소비 경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에도 밀 수요는 현행 수준은 유지할 전망



- 제2의 주곡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산 밀 자급·산업 기반은 낙후
- 식용 밀 국내 수요량은 연간 215만톤 수준(최근 5개년 평균)이나, 국내 생산량은 3만톤(자급률 1% 내외)으로 대외 충격에 취약
 - 국산 밀은 소규모·고가격·품질관리 체계 미흡 등으로 생산·유통·가공·소비 등 가치사슬 전반에서 수입 밀에 열위인 상황
- 최근 대내·외 환경 변화로 국산 밀 산업 육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
- 「밀산업 육성법」 시행('20.2월)으로 종합지원의 법적 근거 확보
 - 코로나19를 계기로 곡물 수출제한, 물류 차질 우려가 대두되어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자급·비축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

☞ 국산 밀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자급기반 확충 및 소비 확산 추진

2

기본계획의 성격 및 주요내용

- (성격) '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'은 「밀산업 육성법」 제5조에 규정된 5년 단위의 법정 계획임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밀 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·유통·소비 전반에 대한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고,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
- 법령이 시행되고 처음 수립·시행하는 종합적인 발전계획

- (내용) 밀 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, 자급률 향상과 수급 조절, 품질 향상, 소비 촉진 내용까지 포함

-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내용별로 연도별 시행 계획을 별도로 수립·시행할 계획

<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>

- ▷ 밀산업의 현황과 전망
- ▷ 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- ▷ 밀의 자급률 향상과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
- ▷ 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
- ▷ 밀,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
- ▷ 밀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- ▷ 밀의 유통구조 개선과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
- ▷ 그 밖에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II

대내외 밀 수급 동향과 전망

1

국제 밀 수급 동향과 전망

□ (수급 동향) 주요국 생산량 증가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소비량 증가분을 흡수하여 현재까지는 수급에 큰 차질은 없는 상황

○ 재배면적은 정체 상태이나, 생산기술 향상에 따른 단위당 생산량 증가 등 공급 상황 양호로 기말재고율(재고량/소비량)이 40% 상회

* 밀 재배면적: ('91) 228백만ha → ('00) 215 → ('10) 217 → ('19) 217

** 1ha당 밀 생산량: ('91) 2.4톤 → ('00) 2.7 → ('10) 3.0 → ('19) 3.5

○ EU·호주 등 주요국 수출은 감소하였으나, 러시아·캐나다 등 신흥국 수출이 증가하여 교역율(교역량/생산량)은 24% 내외 유지

* '16/'17→'20/'21 수출량: (EU) 27→25백만톤, (호주) 23→17, (러시아) 28→37, (캐) 20→24

< 최근 5년 국제 밀 수급동향 >

(단위: 백만톤)

연도	'16/'17	'17/'18	'18/'19	'19/'20	'20/'21(p)
생 산 량	756.3	763.0	731.0	764.1	773.1
소 비 량	738.2	741.9	735.2	747.1	751.0
기 말 재 고	267.1	288.2	283.9	300.9	321.5
기 말재고율(%)	36.2	38.8	38.6	40.3	42.8
교 역 량	183.5	182.6	173.6	190.0	189.9
교 역 율 (%)	24.3	23.9	23.8	24.9	24.6

* 출처 : USDA 「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」('20. 10월)

□ (향후 전망) 인구 증가, 아세안 신흥국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량 증가가 예상되나, 주요국 생산량 확대 등으로 충당이 가능

○ 다만, 최근 기상재해 빈발, 코로나19 등 신종 전염병 확산에 따른 물류 리스크 등 수급불안 요소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

* (호주) '18~'19년 연속 가뭄으로 수출 감소 : ('17/'18) 13.8백만톤→('18/'19)9.0→('19/'20) 9.5

** (러시아)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통제('20), (아르헨티나) 항만노조 파업으로 수출 중단('18)

2

국내 밀 수급 동향과 전망

- (수급 동향) 국내 밀 수요량은 연간 210~220만톤 수준이나, 국내 생산량은 미미하여 대부분 수입 밀로 충당
- 「답리작 활성화 추진계획」('15.7월)에 따른 재배면적 증가로 국산 밀 생산량이 일시 증가하였으나, 수요 부진으로 감소세로 전환
 - * 밀 재배면적: ('14) 7천ha → ('15) 10 → ('16) 10 → ('17) 9 → ('18) 7 → ('19) 4
 - 민간에서 안정적 원곡 조달을 위하여 수입 밀 3개월분을 상시 비축하고, 정부는 필요 시 수급 안정용으로 국산 밀을 소량 비축
 - 국내 밀 수급은 대형 수입 밀 제분·가공업체 중심으로 한 민간 자유통에 의존하여 정부의 수급 조절 기능은 사실상 전무

< 최근 5년 국내 밀 수급동향 >

(단위: 천톤)

연도	'15	'16	'17	'18	'19
생 산 량	26	38	37	26	15
수 입 량	2,355	2,258	2,390	2,331	2,405
수 요 량	2,152	2,156	2,181	2,130	2,128
자 급 률 (%)	1.2	1.8	1.7	1.2	0.7
정 부 비 축 (국 산)	-	-	-	-	10

* 출처 : 수입량(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), 수입량 외(농식품부 양정자료)

- (향후 전망) 낮은 수익성, 판로·수요 확보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, 국산 밀 재배면적·생산량은 정체·감소할 전망
- 다만, 국산 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과잉 생산되고 있는 타 맥류 재배면적을 밀로 전환 시 자급률 향상 기대

* '20년 맥류(밀 제외) 재배면적: 35천ha(그 중 농협·농가 계약면적은 12천ha 추정)

Ⅲ

국내 밀 산업 문제점

1

생산 분야

- (품종) 우수 품종 공급 부족과 품종별 최적 재배방법 미정립에 따라 농가별·지역별로 품질 차이 발생
 - 정부보급종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,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, 비용절감을 위해 자가채종에 의존하는 농가도 상당수 존재
 - * 보급종 공급률/공급량 ('16) 29.4%/614톤 → ('17) 27.8/516 → ('18) 51.5/680 → ('19) 54.1/404
- (작부 체계) 벼 이모작이 대부분으로 조기 수확에 따른 품질 저하
 - 밀 등숙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재배 후기 생산 관리가 중요하나, 후기작인 벼 이앙을 위해 조기 수확하면서 품질 저하 발생
 - 수확기 다습한 기후도 병충해 증가 등으로 품질에 부정적으로 작용
- (품질 관리) 밀 가공적성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 부재
 - 「농산물 검사기준」(농식품부 고시)에 밀 품위 검사규격은 있으나, 피해립·이종곡립·이물 등 물리적 외관에 따라 등급화
 - 밀 가공적성(단백질·회분·용적중·전분점도)을 평가하는 제도·기준이 없어 생산·유통 차별화가 미흡하고, 다수확 품종 선호
 - * 제분업계 자체적으로 밀의 품질을 분석·검사하여 제품 생산에 반영
- (소득) 타 작물 대비 낮은 소득으로, 농지 활용도를 중시하는 농가 중심으로 타 작물 재배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재배
 - 10a당 소득이 162천원으로, 마늘(1,291)·양파(1,108)의 13~15% 수준('19년 기준, 농진청·통계청 조사결과)

- (건조·저장) 국산 밀은 주로 소규모·분산된 형태로 건조·저장되어 품질 균일성 확보, 거래 규모화, 유통 효율화를 위한 개선이 시급
 - 밀 가공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균일한 품질을 갖춘 원곡이 요구되나, 농가나 다수의 소규모 유통주체가 각각 분산 보관·저장
 - * '20년 9월 현재, 농가·업체가 평창고·사일로 등에 국산 밀 5천여 톤 보관 중
 - 계약재배로 생산된 고품질 밀은 안정적인 유통·가공망을 구비하고 있으나, 저품질·불균일 밀은 장기 보관되어 제품화가 어려운 상황
 - * 아이쿱·한국우리밀농협 등 주요 업체의 계약재배 물량은 연간 9천톤 수준
 - 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일로 결로 현상, 저온창고 냉장기능 저하 현상이 발생하여 원곡의 선도 유지가 어려운 시설도 존재
- (제분·가공) 대형 제분업체에서 주로 제분·가공하고 있으나, 국산 밀 사용 업체에 대한 가격 보전 등 인센티브 전무
 - 국산 밀 가격은 수입 밀 대비 3배이나 품질 수준은 확보되지 않아 국산 밀로만 제분·가공 시에는 이윤 창출이 현실적으로 곤란
 - * 최근 5년 수입/국산 밀 평균가격: (수입) 314원/kg, (국산) 1,020, 3.2배
 - 대형 제분업체는 세계적 수준의 제분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, 기존 국산 밀에 대한 품질 등의 문제로 국산 밀 사용에 소극적
 - * 국내 A社は 68개 사일로에 있는 밀을 제분·혼합하여 200여 개의 제품 생산 가능

□ (소비형태) 국산 밀 제품을 선호하는 소수 중심의 다품목·소량 위주로 소비시장 형성되어 대표적 소비품목 부재

○ 국산 밀 대량 소비로 생산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우동면 사례처럼 주력 소비품목 필요

* 일본 우동면의 60~70%는 일본산 밀로 가공·소비(日농림수산성 조사)

○ 국산 밀 제품이 소량 생산되어 제품 노출이 적고 소비시장 형성이 제한적임에 따라 소비자 인식 및 선호도가 낮은 수준

□ (R&D) 정부 주도의 연구·개발 투자 방향·규모 결정으로 현장의 연구수요와 연구성과 간 불일치 발생

○ 최근 5년간 134개 과제에 220억원을 투자하였으나, 품종·생산·품질·가공 등 다방면의 연구가 병렬적으로 진행되어 연구역량 분산

* '15~'19년 R&D 투자규모: (농진청) 124개 과제/191억원, (농기평) 10/29

< 최근 5년간 연구분야별 R&D 투자규모 >

(단위: 개/억원)

구 분	품종	생산	품질	가공	계
농진청 과제수 (예산액)	66 (115)	30 (39)	9 (10)	19 (27)	124 (191)
농기평 과제수 (예산액)	-	2 (8)	-	8 (21)	10 (29)
합계	66 (115)	32 (47)	9 (10)	27 (48)	134 (220)

○ 생산·가공 현장에서 밀 품질 개선을 위해 시급히 요구하는 수확기 고온다습 극복 품종 육성, 표준재배기술 보급 등은 지연

IV

밀 산업 육성 기본방향

1

SWOT 분석 결과



분야별	현 행	개 선
생 산	▪ 소규모·분산된 생산, 품질관리 미흡	▪ 생산단지 위주, 품질관리체계 구축
유통	▪ 소량·분산적 유통	▪ 대량·통합적 유통
가 공	▪ 국산/수입 구분 가공	▪ 국산/수입 연계 가공
소 비	▪ 다품목·소량 소비	▪ 주력품목·대량 소비

2

기본방향과 중점 추진과제

비 전

지속 가능한 국산 밀 산업 기반 구축

목 표

= 2030년까지 밀 자급률 10% 달성 =
2025년 밀 자급률 5%(면적 3만ha, 생산량 12만톤) 달성

5대 추진방향

14개 중점 추진과제

1

생산기반 확충과
품질 고급화



- ① 밀 생산단지 확대와 재배안내서 보급
- ② 보급종 공급체계 개선
- ③ 자급 취약 식량작물 생산 안전망 확충

2

국산 밀
유통·비축 체계화



- ① 국산 밀 건조·저장시설 확충
- ② 국산 밀 비축제도 운영
- ③ 밀 품질관리제도 도입

3

대량·안정적
소비시장 확대



- ① 대량 수요처와 계약재배로 소비 확대
- ② 주력 소비품목 육성
- ③ 음식점 밀 원산지표시제 도입

4

현장문제 해결형
R&D 전환



- ① 밀 안정적 생산 작부체계 구축
- ② 현장 맞춤형 품종 조기 실증·보급
- ③ 수요기반 확대 R&D 투자 강화

5

국산 밀
산업계 역량 강화



- ① 민·관 참여 소비기반 확대
- ② 국산 밀 산업 발전협의체 운영

1

생산기반 확충과 품질 고급화

① 밀 생산단지 확대와 재배안내서 보급 보완

◆ 국산 밀 생산단지를 확대·전문화하고, 고품질 밀 재배기술 현장 근착에 필요한 심층컨설팅 지원 및 재배안내서 작성·보급

* 추진일정: ('20) 재배안내서 제작, 생산단지 20개소 → ('21) 32 → ('23) 45 → ('25) 50

□ (생산단지) '25년까지 전체 재배면적(30천ha)의 50%를 생산단지로 지정하여 컨설팅과 재배안내서 보급 등을 통한 고품질 밀 전문단지 조성

< '20년 생산단지 시범사업 개요 >

- ▷ (목적)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·조직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고품질 국산 밀 생산·유통체계 구축
- ▷ (지원대상) 집단화된 농지 10ha 이상, 단일 품종(금강·조경), 경영체(15인 이상)
- ▷ (지원규모) 개소당 30백만원(국비 50%·지방비 40%·자부담 10%)
- ▷ (지원내용) 종자순도 및 토양 분석, 현장지원단(농진청·컨설팅기관 등 구성) 운영을 통한 재배부터 수확까지 일관 관리 등

○ 국산 밀 생산단지를 50개소(15천ha)까지 확대, 국내 자급률 제고 및 품질 고급화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단지로 육성

* 보리에서 밀 전환 및 농협·가공업체 등 계약재배 농가도 시범사업에 포함

○ 밀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보급종 공급, 재배안내서 작성, 정부 비축, 수확 후 관리 및 현장 중심의 R&D 중점 추진

* 생산단지 조성을 통한 성과를 타 지역으로 보급·확산하여 시범사업 참여 유도

○ 단지별 최대 5년간 지원으로 생산기반 확충, 균일한 품질의 밀 생산

< 국산 밀 자급기반 목표와 밀 생산단지 비중 >

구분		'20	'21	'22	'23	'24	'25
정책 목표	재배면적(ha)	5,224	10,000	15,000	20,000	25,000	30,000
	생산량(천톤)	21	40	60	80	100	120
	자급률(%)	1.0	1.7	2.5	3.3	4.2	5.0
생산 단지	개소수(누계)	27	32	38	42	46	50
	재배면적(ha)	2,834	5,000	7,000	10,000	12,000	15,000
	생산량(천톤)	10	20	28	40	48	60
	담당비중(%)	48.5	50.0	48.0	50.0	48.0	50.0

□ **(컨설팅)** 생산단지별 최적의 생산기반 조성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**현장컨설팅을 품질관리가 포함된 심층컨설팅으로 전환**

* 농진청과 현장전문가(생산자·컨설팅기관 등)가 관리하는 체계 구축

- 현재는 재배안내서 작성, 시비관리 등 재배기술을 중심으로 컨설팅 하고 있으나, 밀 품질 평가·개선 등 수확 후 관리 컨설팅까지 추가

* 밀의 품질을 좌우하는 가공적성(단백질·회분·용적중·전분점도) 검사 및 개선방안 제시

- 전문적 컨설팅을 위해 대규모 단지의 지원단가(3→5천만원/개소) **상향**

* 소요예산: ('20) 300백만원 → ('21) 620 → ('23) 1,050 → ('25) 1,250

□ **(재배안내서)** 생산단지별 토양·품종·기후·작부체계(콩-밀, 벼-밀 등 이모작) 등 재배지역의 특이사항을 반영한 **단지별 재배안내서 마련**

- 기존 참여농가 뿐 아니라 신규 참여농가도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배 기술·관리방법 등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구축

* 고순도 밀 생산을 위해 토양분석(연 3회), 순도분석·포장검사(연 2회) 실시

- '21년 이후 신규 생산단지도 재배안내서를 제작·보급하되, 제작 전 영농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시범재배안내서(부안군우리밀영농법인) 공급 추진

② 보급종 공급체계 개선 신규

◆ 고품질 국산 밀 생산 촉진을 위하여 자급률 5% 달성 시까지 밀 생산단지사업 참여 농가 등에 보급종 할인 공급

* 추진일정: ('20) 제도 개선 → ('21) 1,330톤/7,000ha → ('23) 2,280/12,000 → ('25) 3,230/17,000

□ (공급대상) 국산 밀 자급률 달성 촉진을 위해 생산단지사업 참여 농가 대상으로 정부보급종 50% 할인 공급

○ 자급률 5% 달성 시까지 할인 공급을 추진하되, 생산농가의 만족도와 사업성과를 감안하여 지속 여부 결정

< 보급종 수요량 및 소요예산(신규) >

(단위: ha/톤/백만원)

연도	'21	'22	'23	'24	'25
목 표 재 배 면 적	10,000	15,000	20,000	25,000	30,000
생 산 단 지 재 배 면 적	5,000	7,000	10,000	12,000	15,000
종 자 수 요 량	1,330	1,900	2,280	2,850	3,230
소 요 예 산	831	1,188	1,425	1,782	2,019

□ (공급 확대) 고품질 국산 밀 생산으로 수입 밀 대비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급종 공급 물량 확대 및 종자순도 관리 강화

○ 보급종 종자순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보급종 공급 생산단지 등을 대상으로 품종별 구분 보관·파종 등 전반적인 관리

* 순도 제고를 위해 일괄 보관·파종 전담자 지정 등 타 품종 혼입방지 관리 철저

○ 신속·저비용으로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대용량 분석법을 개발·보급하여 종자순도관리 강화

* 종자원·서울대에서 '21년까지 품종 식별 가능 마커 개발, '22년부터 현장 적용

③ 자급 취약 식량작물 생산 안전망 확충 보완

◆ 밀 등 국민 다소비·자급취약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과 생산 농가의 경영위험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

* 추진일정: ('21) 의견수렴·제도개선 방안 마련 → ('22) 시범사업 → ('23~) 본사업

□ (개선 방향) 논활용직불금 등을 단위면적당 일률적 지원에서 국내 수요량·자급률을 감안한 차등 지원 방식으로 개편

○ 국민 다소비 품목이면서 자급기반 취약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는 식량안보 기여를 인정하여 타 품목 대비 지원단가 차별화 검토

* 밀(동계)-콩(하계) 등 자급취약 식량작물을 2모작하는 농가는 가중 지원

○ 보리 등 기존 과잉생산 품목에서 밀 생산으로 전환하는 농가를 사업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품목 간 수급 불균형도 완화

* 재배면적(보리/밀) : ('16) 37천ha/10 → ('17) 29/9 → ('18) 47/7 → ('19) 44/4

□ (재해보험 개선) 기상재해 발생 시 밀 생산농가의 경영·소득 안전망 기능이 가능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성 개선

* 약관 개정 연구용역으로 개선방안 마련('21년), 관계자 의견수렴 후 개선 추진

○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지역을 밀 생산단지 등 재배지역 중심으로 확대하여 재해보험 사각지대 해소

* '20년 기준 밀 재해보험 가입대상지역 : 광주, 전남, 전북, 경남, 충남 등 5개 시도

○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어 온 보험 종료시점(보장종기)을 전 지역 동일하게 적용하여 보장기간 착오에 따른 현장 애로 해소

* ('19년:기준) 충남 6.30일, 기타지역 6.20일 보장종료 → ('20:변경) 전지역 6.30일 보장종료

2

국산 밀 유통·비축 체계화

① 국산 밀 건조·저장시설 확충 신규

◆ 국산 밀 주산지 중심으로 품종별 구분 보관, 품질 균일성 확보에 필요한 건조·저장시설 확충 및 파종·수확 기계·장비 병행 지원

* 추진일정: ('20) 사업시행지침 마련 → ('21) 2개소 → ('23) 4(누계)

□ (기본 방향) 건조·저장시설은 향후 제2차 기본계획('26~'30)까지 연계하여 대규모 생산·유통 거점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에 투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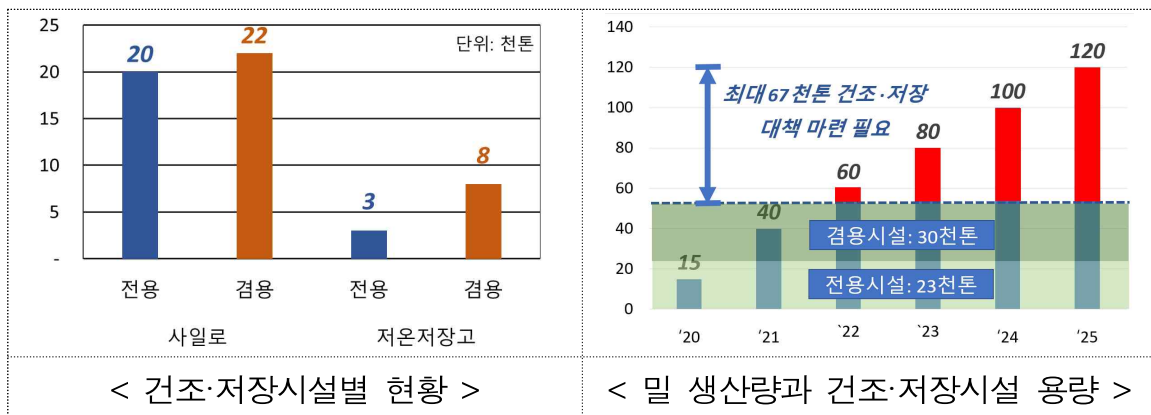
○ 현재 국내 밀 건조·저장시설(30개소) 저장용량은 53천톤(전용 23, 겸용 30)이며, '25년까지 생산량의 50%(60천톤) 수준 저장 가능 전망

○ '25년까지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, 부족 용량은 정부 비축, 수확 후 조기 소진 등으로 해소

* '25년 부족 용량(최대 67천톤) 해소 = 정부 비축(30) + 조기 소진(37)

○ 중장기적으로('26년~) 밀 생산량의 50%를 유통의 규모화·효율화, 품질관리를 위해 사일로·저온고를 갖춘 지역 거점에 보관·유통 추진

* 향후 밀 재배면적 확대와 저장기술 개발 등을 고려하여 비축기지 역할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축 지원



□ (시설 확충) 인근 밀 생산단지와의 연계 활용, 지역 내 거점시설로의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국산 밀 전용 시설 신축 지원

○ 지역별 건조·저장시설 실태조사('20.8월) 결과를 감안, 밀 생산단지 집중 지역, 대규모 재배면적 확보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원

* B시·군의 밀 생산량은 4천톤 수준이나, 건조·저장시설 규모는 8천톤 규모. 반면, C시·군의 생산량은 3천톤 수준이나, 건조·저장시설 규모는 2천톤 미만

○ 신축시설은 품종별 구분 비축·유통이 가능하도록 설계·시공(개소당 1천톤)하여 제분·가공업체의 품질 균일화 요구에 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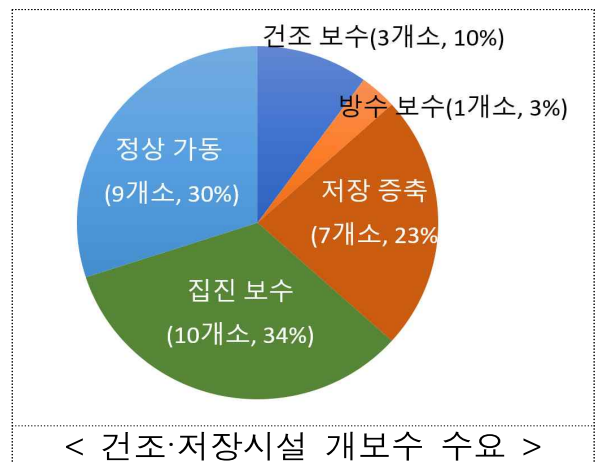
< 밀 전용 건조·저장시설 구축 지원 >

- ▷ (목적) 주산지 내 생산된 밀의 통합 건조·보관을 통해 밀 품질 균일성 확보
- ▷ (지원규모) 4개소(밀 생산단지 중심으로 선정)
- ▷ (지원조건) 국비 40%, 지방비 40%, 자부담 20%
- ▷ (투자계획) ('21~'22) 1,440백만원(2개소) → ('23~'24) 1,440(2)

□ (시설 개보수) 기존 시설 노후화, 재배면적 확대로 기능 보강이 필요한 지역은 개보수를 지원하여 신설 수요와 중복투자를 최대한 억제

○ 전국 밀 건조·저장시설 30개소 중 개보수가 필요없는 시설은 9개소 (30%)에 불과하여 기능 보강 시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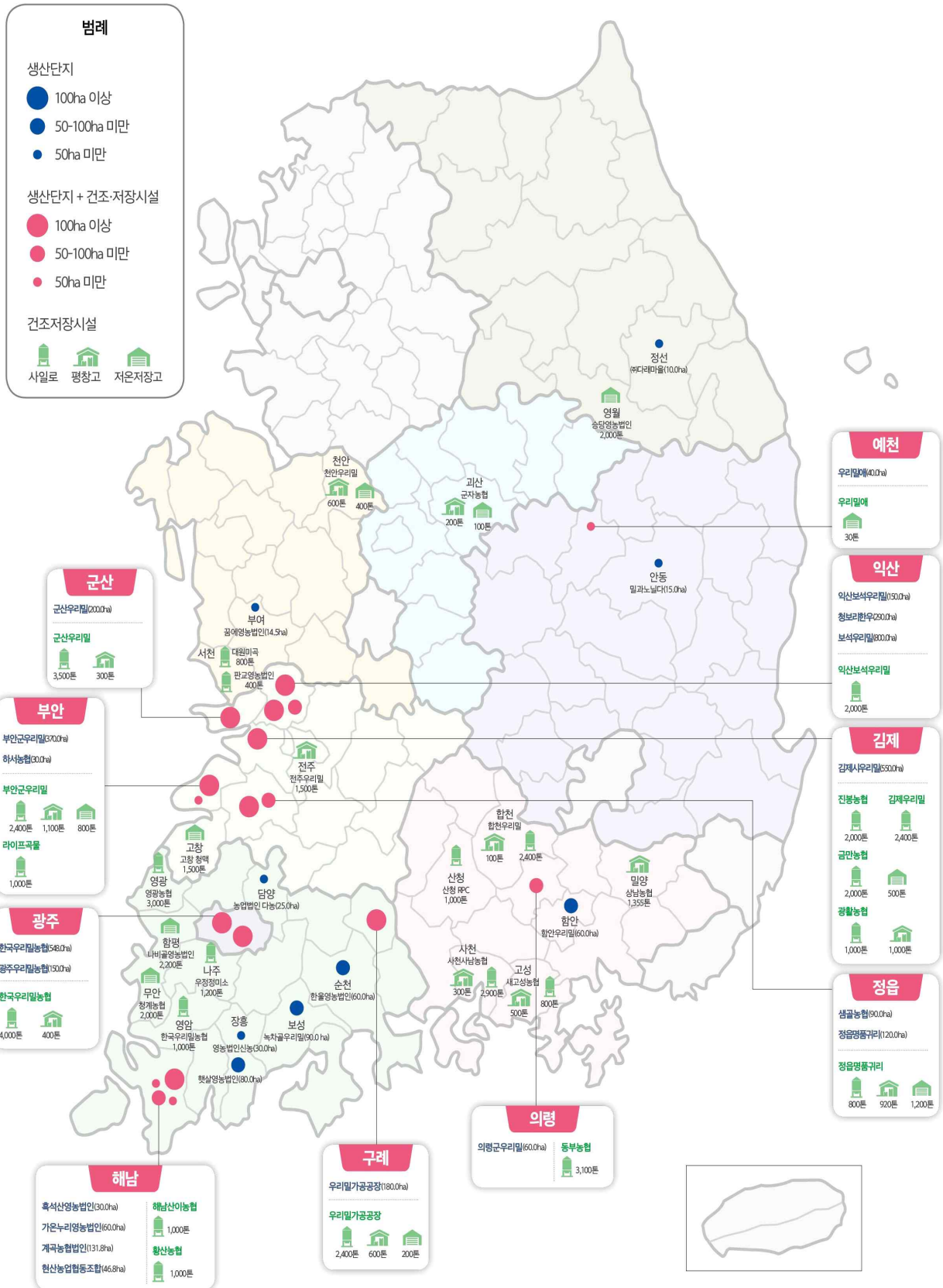
○ 밀 품질관리에 중요한 건조·방수·저장 기능 개보수부터 우선 지원하고, 예산 확보상황을 감안하여 집진 기능 개보수도 추진



□ (기계·장비) 건조·저장시설 운영주체가 해당지역의 밀 생산·유통을 전담할 수 있도록 파종·수확 등에 필요한 기계·장비 지원도 병행

○ 건조·저장시설이 중심이 되어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관된 품종·품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세조파 파종기, 범용콤바인 등 지원 추진

< 전국 밀 생산단지와 건조·저장시설현황('20년) >



② 국산 밀 비축제도 운영 확대

◆ 국산 밀 생산 증가량의 일부를 정부에서 비축하고, 체계적인 공급 관리를 통해 국산 밀 수급 안정화 도모

* 추진일정: ('20) 3천톤 → ('21) 10 → ('23) 20 → ('25) 30(국산 밀 생산량 25%)

□ (비축 규모) '25년까지 자급률 5% 목표 달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비축물량을 확대하여 국산 밀 재배면적 확대 견인

- 생산량 증가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부가 국산 밀 생산량의 25%('25년 30천톤)를 수급 안정 및 식량안보 확보 차원에서 비축
- 안정적이고 균일한 품질의 밀 비축을 위해 생산단지 밀을 우선 확보하고, 친환경인증 밀 비축(20%, '21년 2천톤)을 통해 차별화된 시장 구축 유도

< 국산 밀 생산목표 및 정부비축 계획 >

구 분	'21	'22	'23	'24	'25
생산목표(천톤)	40	60	80	100	120
비축계획(천톤)	10	14	20	24	30
친환경인증(천톤)	2	3	4	5	6
비축예산(백만원)	10,986	15,381	21,973	26,367	32,959

□ (방출 방식) 비축 밀의 품질·생산연도에 따라 방출 가격을 구분,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산 밀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

- 비축기지 내 품종·품질별 물량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, 비축물량에 대한 정보 제공 추진

* (예시) OO 비축기지: 조경 I (1,000톤), 조경 II (2,000톤), 금강 II (2,000톤)

- 비축 밀을 업체 수요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비축·제분·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반기·분기별 방출계획 수립·시행

③ 밀 품질관리제도 도입 신규

◆ 국산 밀 품질 고급화, 유통·가공 차별화를 통한 맞춤형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가공적성을 감안한 품질관리기준 도입·시행

* 추진일정: ('21) 품질기준 연구용역 → ('22) 법제화 → ('23~) 품질관리제도 시행

□ (품질 평가) 밀은 제분·가공을 통한 제품 형태로 최종 소비되므로 원곡의 가공적성을 평가하는 「밀 품질관리제도」 도입

○ 품질평가 항목·기준치는 우리나라와 소비형태가 유사한 국가의 사례를 참고로 하되,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게 설정

* 일본은 ① 빵·중화면용, ② 일본면(우동)용, ③ 양조용으로 구분, 4개 평가항목 설정

< 참고: 일본의 밀(제빵용) 평가항목 >

평가항목	단백질	회분	용적중	전분정도
기준치	11.5~14.0%	1.75%이하	833g/L이상	300이상
허용치	10.0~15.5%	1.80%이하	-	200이하

□ (가격 차별화) 밀 재배 농가의 품질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밀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등급을 적용하여 정부 매입단가를 차등 지급

○ 국산 밀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, 장기 비축에 따른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 등급을 감안한 비축·유통 체계 정착

* 일본의 경우, 직불금 지급 시 4개(A~D) 등급별로 8,810~8,100/60kg 차등 지급

○ '19년 국산 밀 비축 시에 적용한 외관 중심의 품질 등급 판별 기준을 개선하고, 밀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등급별로 유통 차별화

< 국산 밀 비축 시 품질 등급 판별 기준('19) >

구분	품위	순도	단백질
품질 양호	1등급 이상	80% 이상	가공용도별 적정 단백질 함유
품질 보통	2등급 이상	60% 이상 ~ 80% 미만	
품질 미흡	등외 이상	60% 미만	단백질 부적합

3

대량 · 안정적 소비시장 확보

① 대량 수요처와 계약재배로 소비 확대 신규

◆ 국산 밀의 차별화와 안정적인 생산-소비 연계를 위해 친환경인증 밀 농가 등과 계약재배하는 실수요업체에 무이자 융자 지원

* 추진일정: ('20) 예산 확보 → ('21) 4천톤 → ('23) 18 → ('25) 40(누계)

□ (계약 물량) '25년까지 국산 밀 재배농가와 실수요업체 간 계약재배 물량을 40천톤(누계)까지 확대하여 안정적인 소비 물량 확보

- 국산 밀 유통·제분·가공업체의 기 계약물량을 제외한 신규·추가 계약물량에 대한 무이자 융자 지원으로 업체 자금 조달부담 완화
-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, 실수요업체는 균일한 품질을 갖춘 국산 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
- 특히, 친환경인증 밀 생산 농가와 계약하는 업체는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국산 밀의 차별화된 소비 시장 구축

* '20년 친환경인증 밀 취급 8개 업체, 2,126톤(유기 470, 무농약 1,656) 계약 중

□ (확대 방안) 매년 계약재배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실수요업체에 대해서는 사업물량 우대 배정 등 지원 확대

- 대다수 업체가 국산/수입 밀의 가격 차로 계약물량을 최소한으로 운영 중이나, 무이자 지원 시 계약재배 물량 확대 가능

< 밀 계약재배 물량 및 소요예산(신규) >

(단위: 톤/백만원)

연도	'21	'22	'23	'24	'25
계 약 물 량	4,000	6,000	8,000	10,000	12,000
소 요 예 산	3,766	5,650	6,849	9,416	11,299

② 주력 소비품목 육성 신규

◆ 주력 소비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, 대량 소비처에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생산비 지원을 통해 국산 밀 산업 발전 도모

* 추진일정: ('21) 시범사업 → ('22) 공공급식 15개소 → ('23) 20 → ('25) 30

□ (소비 확대) ①국산 밀 품질수준, ②품목 소비량, ③수입밀 대체 가능성 등을 감안한 전략적 소비품목을 육성하고 대량 소비처를 통해 공급

○ 우선 시장조사·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전략 품목을 선정('21)하여 대중화하고, 차후 여건변화에 맞춰 주력 소비품목 다양화 추진('22~)

* 일본은 우동면(중력분)에서 자급률 제고 후 제빵·중화면(강력분)으로 품목 다양화

○ 국산 밀 가공업체 생산제품의 공공급식 사용 확대방안을 유관단체와 협의·지원하고, 공공급식 분야와 공급계약 체결 시 인센티브 제공('22)

□ (생산비 지원)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국산 밀가루·가공제품에 함유된 국산 밀의 품질·제분비율·사용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

○ 친환경인증 밀과 국산 밀 100%를 활용한 밀가루·가공제품은 제분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공급업체·수요업체의 부담 경감

○ 관행재배 밀, 수입산과 혼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실적에 따라 제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산 밀의 적극적인 사용 유도

* 국산 밀 혼용 비율이 높고 사용량이 많을수록 제분비용을 우선 지원하되, 대형업체의 수혜 편중을 막기 위하여 상한액 설정 검토

< 국산 밀 제분·활용 생산비 지원(안) >

(단위: 톤, 억원)

구분	'22년*	'23년	'24년	'25년
목표 물량	6,000	8,000	10,000	12,000
지원금액(안)	12	16	20	24

* ('22) 12억원 = 6,000톤(공공급식 15개소 x 400톤) x 200천원/톤(제분비용+유통비용)
D업체의 경우 연간 350~400톤 소비, 제분비용 120~130천원/톤, 유통비용 70~80

③ 음식점 밀 원산지표시제 도입 신규

◆ 음식점 밀 메뉴 중 국산 밀로도 수입산과 품질 경쟁이 가능한 메뉴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여 국산 밀 대중화 추진

* 추진일정: ('21) 연구용역 → ('22) 법령 개정 및 홍보 → ('23~) 시행

□ (기초 조사) 음식점 밀 원산지표시제 도입 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메뉴와 소비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('21년)

○ 현재 표시대상 국산 농축산물은 제도 시행을 통한 보호이익이 충분하나, 밀 자급률이 1% 내외인 상황에서 규제로 작용 가능성 검토 필요

< 현행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농축산물 >

구 분	품목수	품목명
농산물	3	배추김치(배추·고춧가루), 쌀(밥·죽·누룽지), 콩(두부·콩비지·콩국수)
축산물	6	소·돼지·닭·오리·양·염소고기

○ 밀·밀가루를 식재료로 사용하는 업소는 대부분 영세·소규모가 많아 단계적인 도입·확산 추진

□ (대상 품목·업소) 국산 밀 품종·품질, 안정적인 생산·공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표시대상 품목·업소를 단계적으로 선정

○ 국내 생산량이 많고 수입산과 품질 경쟁이 가능한 연질밀 사용 메뉴(칼국수·수제비·국수 등)부터 표시대상으로 우선 검토

○ 집단급식소 등 공공급식 분야부터 우선 시행하고, 연차적으로 표시대상 업소를 확대하여 연착륙 도모

* 유형별 음식점: 일반음식점 649천 개소, 휴게음식점 148, 위탁급식소 11, 집단급식소 8(2019년도 식품의약품 통계, 식약처)

① 밀 안정적 생산 작부체계 구축 보완

◆ 벼 중심 이모작에서 밀 중심의 최적 안정생산을 위한 맞춤형 재배 기술개발·구축과 이모작 작부체계 기술 보급

* 추진일정: (∼'22) 작부체계 개발 → ('23) 농가 실증 → ('24∼) 종합재배 기술보급

□ (기술 개발) 밀 이모작 안정적 생산을 위한 맞춤형 재배기술 개발

○ 고품질 밀 생산 중심의 논이용 밀-벼 이모작 최적 작부체계 개발

* 밀 수확기를 고려한 벼 이앙시기·생육기간 등 생태조건별 적정 품종 조합 개발

** 밀 파종시기(적기·만기) 변동에 따라 벼 이모작 적정 품종 조합 개발

○ 밀-콩·옥수수 등 타 밭작물과 연계한 이모작 작부체계 개발

* 이모작 밀의 안정적인 생육·수확기간 확보가 가능한 밭작물(두류·서류 등)과 사료작물(사료용 옥수수·수단글라스 등) 품종 발굴 및 재배법 정립 등

□ (보급 확산) 최적의 밀 이모작 작부체계를 현장에 조기 확산·정착

○ 밀 생산단지와 연계하여 밀-벼, 밀-밭작물 작부체계를 실증하고, 산·학·관·연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실효성·경제성 등 정밀 검증

○ 작부체계 개선 실증·검증을 통해 소득 향상·생산비 절감 사례 등은 교육·홍보 확대로 이모작 작부체계 참여 농가 확산

○ 밀 이모작에 따른 작업시간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해 일괄파종작업 체계가 가능한 기계화 도입·보급

* 경운·파종·복토·시비 등 일괄 작업으로 총 작업시간 29% 절감(기존 52시간 → 37)

② 현장 맞춤형 품종 조기 실증·보급 보완

◆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·기능성 품종을 농가에 조기 보급하여
국산 밀 산업 부가가치 향상 및 생산성 확보

* 추진일정: ('20) 자원 선발 → ('21~'22) 농가생산단지 실증 → ('23~) 현장 보급

□ (자원 선발) 국내·외 유전자원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우수자원 선발

* 지역적응성·농업형질·생산단수·품질평가, 제빵적성·유전자특성조사 병행

○ 우수자원의 현장 실증시험에 국산 밀 생산단지 참여 농가를 포함하여 조기 실증 및 재배 가능성 확인

* '19~'20년 연구결과 우수자원에 대해 '21년 농가 실증재배 : 농진청 10개, 생산단지 2개

□ (차별화) 수입 밀과의 차별화를 위해 고품질·기능성 품종 조기 보급

○ 제빵용·기능성 우수 품종의 농가 조기 보급과 산업화 촉진으로
수입산과 차별화된 새로운 시장 창출

* 제빵용: (황금밀) 조경밀 대비 단백질 33%·글루텐 32% ↑, 빵부피 24% ↑

** 기능성: (오프리) 세계 최초 알레르기 유발 단백질 제거<국내특허 '19, 미국 특허 '20>,
(아리흑) 국내 최초 흑자색 유색밀<식물특허등록 '19, 품종출원 '20>

○ 통밀 소비 촉진을 위한 영양성분 및 가공기술 개발 연구 강화

* 무기질·식이섬유, 비타민 B1·B2 등 밀기울을 포함하여 종실 전체에 함유

□ (국제 교류) 해외 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밀 관련 R&D·정책·시장 정보 교류 등

○ 농진청, 해외연구기관, 국내·외 대학 간 협동 연구·개발 프로그램을
통해 국내·외 품종의 재배방법, 수확 후 관리기술 비교·개발

○ 해외 대학,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 중인 우리나라 출신 밀 전문가와
주기적인 교류 강화로 해외 주요 밀 유전자원 정보 습득

③ 수요기반 확대 R&D 투자 강화 보완

◆ 생산에 편중된 R&D를 국산 밀 수요 확대에 필요한 R&D까지 확장하고, 우수 성과는 농가·업체에 조기 보급 추진

* 추진일정: ('20) 40억원(18개 과제) → ('21) 50 → ('23) 60 → ('25) 80

□ (연구역량 확충) 농촌진흥청 밀연구팀(한시조직)을 과단위 정규조직으로 확대·개편('21년)하여 현장의 시급한 연구과제 해결에 역량 집중

○ 밀 연구인력을 보강(2연구실 10명 → 3연구실 16명)하고, 품종·재배 중심 연구에서 품질관리·가공소비까지 연구범위 확대

< 현재(농진청 중심) >

· 품종 : 용도별 개발
· 재배 : 고품질 재배단지 조성

< 확대·전환(대학·민간연구소 참여) >

· 품종 : 소비 트렌드 맞춤형 품종 개발
· 재배 : 최적 작부체계 맞춤형 재배기술
· 유통 : 수확 후 관리, 유통 플랫폼 구축, 이력관리 기술
· 가공·소비 : 제분·블렌딩·기능성·수요처 특성별 가공기술

□ (역할 분담) 농진청은 품종 개발, 최적 작부체계 정립, 재배·관리 기술 개발 등에 연구역량을 집중

○ 유통·가공·소비 분야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연구기관·선도기업과 협동연구를 통해 연구수요와 연구성과의 불일치 해소

○ 우수 연구성과 및 산업화 기술은 농기평·실용화재단을 통해 농가, 제분·가공업체에 조기 보급·확산 추진

* 업체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술을 개발·보급하여 수요가 생산을 견인하는 생태계 조성

< 향후 5년간 밀 R&D 투자계획(안) >

구 분	'21	'22	'23	'24	'25
투자규모(억원)	50	55	60	70	80
▪ 농진청	35	38	40	45	53
▪ 농기평	15	17	20	25	27

5

국산 밀 산업계 역량 강화

① 민·관 참여 소비기반 확대 신규

◆ 국산 밀 사용 확대 기업·지자체와 공동 홍보·마케팅을 통해 국산 밀 수요 창출을 민·관이 동반 견인

* 추진일정: ('21) 대표 기업·제품 MOU 체결 → ('22~) MOU 확산·홍보

□ (기본 방향) 기업·지자체의 국산 밀 수요 창출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, 우수 기업·지자체는 적극적으로 발굴·우대

- 안정적 소비기반이 구축될 때까지 초기에는 정부가 주도적인 중개자 역할을 하고 점진적으로 민간 중심으로 발전 유도
- 생산자단체·지자체와 기업 간의 '착한 생산-소비'의 선순환 상생 모델을 발굴하여 확산

□ (추진 방안) 국산 밀 사용 확대에 동참하는 기업·업계와의 전략적 제휴(MOU)를 통해 소비 확산 홍보

- 제빵·제면·제과 등 주요 소비 품목별로 대표적 기업·제품을 발굴하고, 정부·지자체·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공동 홍보·마케팅 추진
 - * 국산 밀 사용실적은 생산추이를 감안, 연차적으로 상향하여 참여기업의 부담 완화
- 공공·단체급식에 국산 밀 사용 제품 확대 유도
 - * 소비자단체 중심으로 국산 밀 함유 제품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정보 제공
- 국산 밀 주산지 시·군은 먹거리 종합계획(푸드플랜)에 생산·소비 확대 방안을 포함토록 하고, 우수사례는 전국으로 확산 지원
 - * E군은 관내 유치원·어린이집에 국산 밀 제품 구입을 지원하고, 국산 밀 사용 업체에 대해 생산비 일부 지원 중

② 국산 밀 산업 발전협의체 운영 신규

◆ 국산 밀 업계의 정기적 소통·협력채널인 산관학 협의체를 운영하고, 결속력·자생력 강화로 국산 밀 산업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발전 유도

* 추진일정: ('21~) 발전협의체 구축·운영 → ('23~) 대표 조직 유도

□ (기본 방향) 국산 밀 생산자, 가공·제품업계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(가칭)'국산 밀 산업 발전협의체' 구축·운영

* (정부) 농식품부·농진청, (유관기관) aT·농협경제지주·한식연, (지자체) 밀 주산지 시·군, (민간) 우리밀 단체·협회, 생산단지 대표, 제분·가공업계 등

○ 국산 밀 당면현안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·협력하는 체계를 구축('21)하고, '23년이후 자조금단체 등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마련

* 작황·가격·수급 동향, 현장 필요 R&D과제 발굴, 국산 밀 활용 신제품 개발 동향, 홍보·마케팅 계획 수립, 공공급식·로컬푸드 공급 확대 방안 등 논의

○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점검·보완 등의 역할을 하는 실무회의(분기별 운영) 창구로도 활용

□ (역량 강화) 국산 밀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공동이익 추진과 자생력 강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발전협의체의 기능·역량을 강화

— < 민간·정부 역할 분담 —

▷ (민간) 국산 밀 산업 자생력 강화와 대국민 긍정 인식 확산을 주도

▷ (정부) 초기 대규모 투융자가 필요한 생산·유통기반 확충에 집중

○ 발전협의체의 협의 기능을 활용, 생산자단체에 제분·가공업체까지 참여하는 자조금단체 성격의 조직으로 발전 유도

○ 정부 주도에서 점진적으로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전환하여 체계적·연례적인 홍보·소비 촉진 여건 조성

붙임1 제1차(2021~2025)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 로드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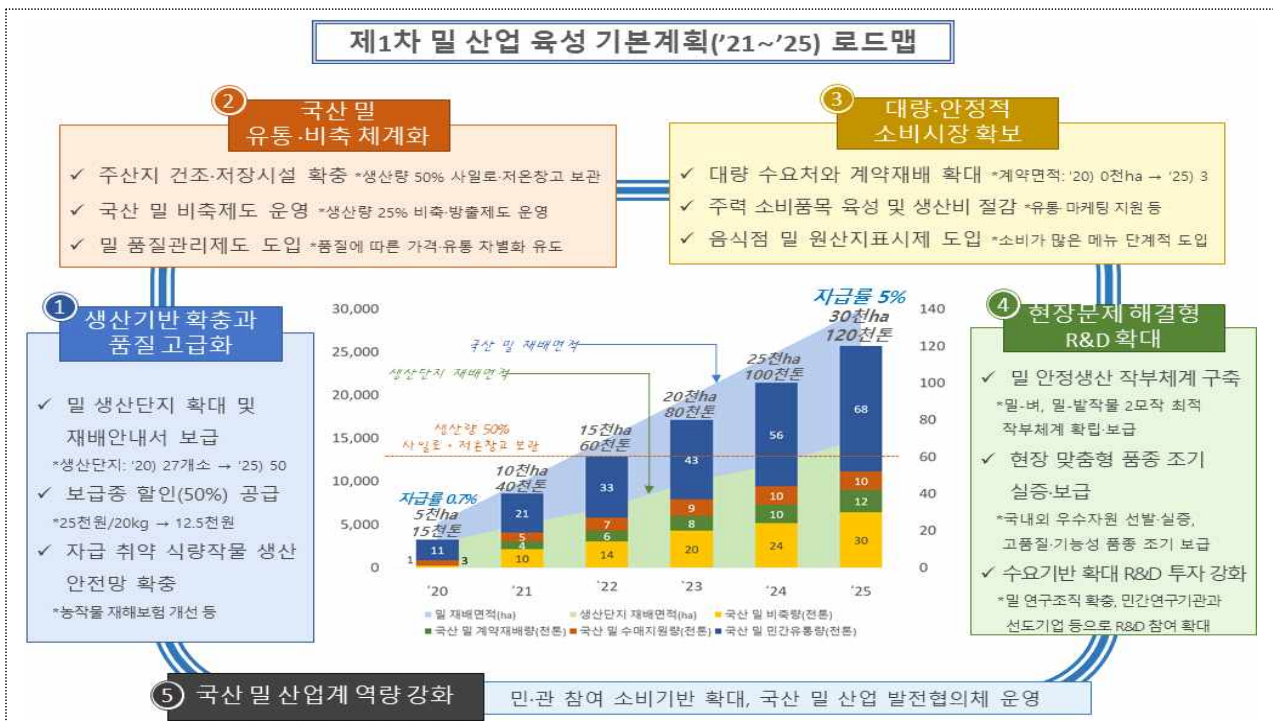
□ 국산 밀 생산 관련 목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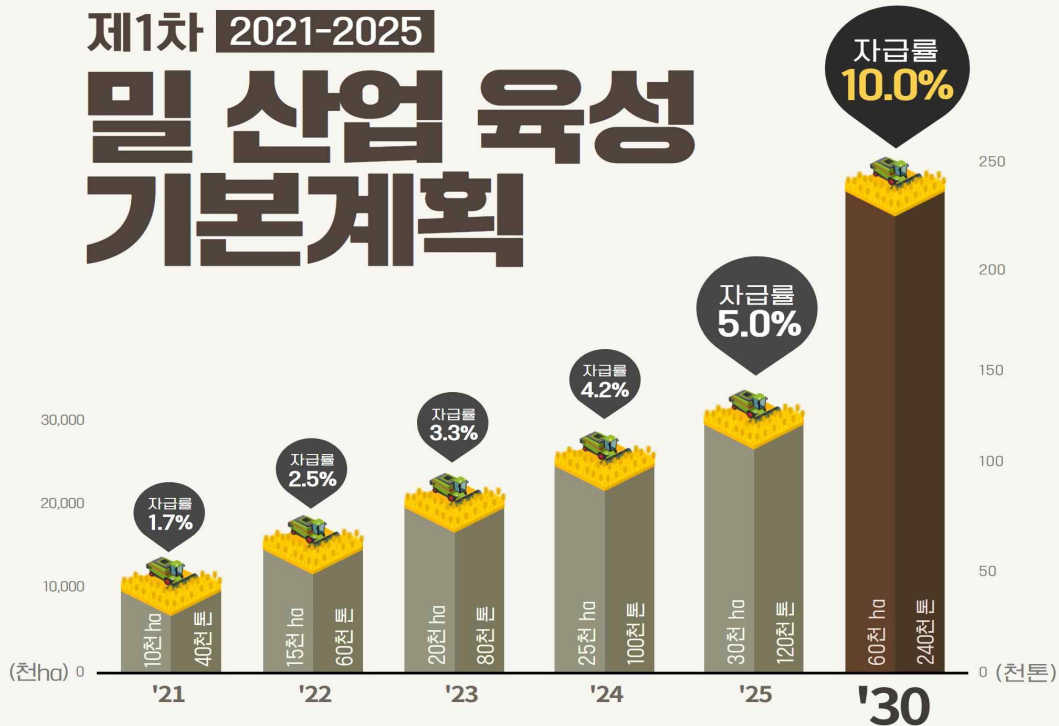
구분		'20	'21	'22	'23	'24	'25
재배 면적 (ha)	합계	5,224	10,000	15,000	20,000	25,000	30,000
	자급률(%)	1.0	1.7	2.5	3.3	4.2	5.0
	생산단지	2,834	5,000	7,000	10,000	12,000	15,000
	개소수(누계)	27	32	38	42	46	50
	생산량(천톤)	10	20	28	40	48	60
	보리 전환	-	3,000	5,000	6,000	8,000	9,000
	기타	2,390	2,000	3,000	4,000	5,000	6,000
생산량(천톤)		21	40	60	80	100	120
보급종 공급물량(톤)		-	1,330	1,900	2,280	2,850	3,230
국산 밀 비축 계획(천톤)		3	10	14	20	24	30
건조·저장시설 신축(개소)		-	2	-	2	-	-
계약재배 면적(ha)		-	1,000	1,500	2,000	2,500	3,000

* 생산량 단위 적용 : '20년 기준 400kg/10a

* 보급종 : (평균 파종량) 190kg/ha, (평균 단가) 25천원/20kg, (연도별 물량·예산안) 익년도 생산 단지 면적을 기준으로 전년도 파종 수요량 산정

□ 국산 밀 생산·유통·소비분야 주요 추진계획





1 생산기반 확충 및 품질 고급화

- ☑ 밀 생산단지 확대 및 재배안내서 보급
 - 생산단지: '20) 27개소 → '25) 50
- ☑ 보급종 할인(50%) 공급
 - 25천 원/20kg → 12.5천 원
- ☑ 자금 취약 식량작물 생산 안전망 확충
 -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등

2 국산 밀 유통·비축 체계화

- ☑ 주산지 건조·저장시설 확충
 - 생산량 50% 사일로·저온창고 보관
- ☑ 국산 밀 비축제도 운영
 - 생산량 25% 비축·방출
- ☑ 밀 품질관리제도 도입
 - 품질에 따른 가격·유통 차별화

3 대량·안정적 소비시장 확보

- ☑ 대량 수요처와 계약재배 확대
 - 계약면적: '20) 0천ha → '25) 3천ha
- ☑ 주력 소비품목 육성 및 생산비 절감
 - 공공급식 제품 유통·마케팅 등 지원
- ☑ 음식점 밀 원산지표시제 도입
 - 소비 비중이 높은 메뉴부터 단계적 도입

4 현장문제 해결형 R&D 확대

- ☑ 밀 안정생산 작부체계 구축
 - 밀·벼, 밀·밭작물 이모작 최적 작부체계 보급
- ☑ 현장 맞춤형 품종 조기 실증·보급
 - 우수자원 선발·실증, 고품질·기능성 품종 보급
- ☑ 수요기반 확대 R&D 투자 강화
 - 연구조직 확충, 민간연구기관·기업 등 참여

5 국산 밀 산업계 역량 강화

- ☑ 민·관 참여 소비기반 확대, 국산 밀 산업 발전협의체 운영